

報道資料



보험개발원

제공일자	2006년 9월 28일	
담당자	이태열 실장	368-4177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	368-4093
총 8 매		

9월 29일 조간부터 게재해 주십시오.

2006 보험개발원 국제세미나 개최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은 『고령화 사회에서 민영보험의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9월 29일 오후 2시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한 선진 각국 사례를 통해 민영보험의 역할과 경험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자리였다. 서강대 이경룡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측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도규상 과장과 보건복지부의 배병준 팀장, 학계에서는 건국대의 김원식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병호 본부장,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박현문부사장과 LIG손해보험의 이명주 전무가 참석하여 토론함으로써 각 입장을 대표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는 보험연구소의 오영수 소장,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의 헨케 교수 그리고 스위스 연금교육센터의 누스바움 원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발표자들은 모두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 및 의료보장을 공적 보험 중심으로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민영보험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영수 소장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과 역할 분담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노후건강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민영보험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헨케 교수는, 공적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장을 감소시키고 민간보장을 확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적인 개인보험의 도입, 현행 급여를 기준으로 한 기여제도의 대체, 성과중심적 유인책과 배상책의 시행, 적립방식의 건강보험제도의 운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건강보험에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자신의 생각은 유럽법과 유럽사법당국의 견해와도 일치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누스바움 원장은, 한국의 경우 연금시스템 사이의 상호연계관계가 취약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1층에는 부과방식의 기본연금제도를 설립하고, 2층에는 완전적립방식의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의 역할을 활성화하며, 3층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장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누스바움 원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연금체계의 전환은 중대하고 장기적인 설계인 만큼 공공, 기업, 개인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 1주제: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회사의 역할 강화(오영수 소장)

민영보험 활성화로 고령화 리스크 줄여가야

제1주제 발표에 나선 오영수 보험연구소 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회사의 역할 강화」라는 발표문에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적절히 강화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기업 및 정부의 리스크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수 소장은 공보험과 민영보험간 역할 분담이 필요한 이유를 공적연금 재정위기의 구조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재발 가능성과 같은 공보험의 위기에서 찾으면서 민영보험의 역할이 적절히 부여된 다층보장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국제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세를 볼 때 개인의 자조 노력과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정 전반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활력이 충만한 노후보장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략으로 노후보장을 위한 정부재정의 선택과 집중, 시장경제원리 확대, 민간보험의 활성화, 개인의 자조 노력 지원 등을 꼽았다.

이러한 방향 하에 민영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먼저 노후소득 분야에서는 공적연금의 유지가능성을 높이고 민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이외에 특수직역연금 가입대상인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도 가입하도록 하고, 이들 특수직역연금은 제도 재설계를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퇴직연금의 위치로 재조정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균등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대체시키고 소득비례부분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퇴직연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도 설계와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 기반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노후건강보장 분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층적 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고, 장기간병보험의 경우에는 제반 운영기준의 통일을 도모함과 아울러 간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도록 하되 의료의 과다이용 및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질병위험률의 공유, 민간보험사업자간 언더라이팅 정보 공유, 민간진료심사제도 별도 설치, 별도의 세제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후생활 분야의 경우 민간을 참여시켜 운영 주체를 다원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노인대상 영리법인의 허용, 노후주거서비스 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도 적절한 사업모형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보험 본업은 생애기간 동안 재무적 안전을 공급하고, 본업 관련 부수사업은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본업에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노후보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2주제: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협력관계(헨케교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제의 구축 개요

Klaus-Dirk Henke(클라우스 디르크 헨케)교수는 「공공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라는 발표문에서 건강보험제도는 편익 제공보다는 편익보장을 중시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속가능하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기본적인 보장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민간보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enke교수는 **유럽 건강보험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인구구조의 변화, 부과방식으로 인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여율 증가, 제도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 등에 따라 현재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고령화,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도덕적 해이 등을, 공급 측면에서는 의학 기술 진보, 의료공급자에 의한 유인수요 등을, 마지막으로 정부 측면에서는 병원의 과다공급을 유발하는 병원 관련 정책, 과다 규제, 정책 오류 등을 지적하였다.

유럽 각국은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해결책으로 출산율의 증대, 조세와 소득세를 지불하는 이민자의 증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부분적립방식,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노령인구의 각출 확대, 의료보험체제의 효율성 향상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출과 서비스를 삭감함과 아울러 효율인상, 세원확대, 피보험자 확충 등을 통해 수입을 증가시키며, 구조적 개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해결책으로는 저소득층 공공지원을 하고 있는 총인구에 대한 **의무적인 개인보험 도입**, 현행 급여를 기준으로 한

기여제도의 대체, 리스크 선택이 아닌 리스크 조정, 자원할당(보험)과 재분배(가족수당)의 분리, 성과중심적 유인책과 보상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적립방식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제안하였는데, 이 방식의 특징은 개인을 기준으로 **전 생애에 걸쳐 1인당 보험료와 급여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데 있다. 이 방식하에서는 자원배분(보험)과 재분배가 분리되어 효율성이 높아지며, 자본소득이 적립되고, 인구구조상 세대간 독립성이 커지게 되어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Henke교수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은 건강보험부문의 **시장확대와 민영화에 찬성하는 유럽법과 유럽사법당국의 견해와 일치**한다며, **한국도 유럽의 이러한 동향에서 시사점을 얻어 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제 3주제: 한국의 공적연금개혁과 민영연금의 과제(누스바움 원장)

한국의 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이 시급

Werner Nussbaum(베르너 누스바움)원장은 제3주제 「공적연금 개혁과 민영연금의 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층연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층”의 의미를 단순한 “층”의 추가가 아닌 연금시스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로 볼 때 한국의 연금시스템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경우 1963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연금보장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단지 보장에 있어서의 상호연계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금기관 또는 연금시스템간의 상호연계와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정급부방식의 연금운영에 있어서의 리스크와 기금적립의 불충분성이 크며 계리적인 관점의 지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발전한 유럽과 미국의 여러 국가들은 다층연금체계의 필요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다층연금체계는 인구구조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단층연금체계보다 더 효율적이며, 또한 연금기관과 연금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와 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서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사망률의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금적립 재정확보의 불확실성, 급속한 사회적 변화 등의 위험에 예외일 수 없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존하는 단층연금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다층연금체계로 전환하고 층간의 조화로운 상호연계와 이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하여 정부예산을 통한 기초 시스템을 설립하고 1층에서 각출을 전제로 한 DB형태의 부과방식(PAYG)을 통한 기본연금제도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층에서는 완전적립방식 체계를 설립함과 동시에 연금기관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사의 역할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의 저축과 보험을 3층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층간의 이동성에 관한 통산 규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erner Nussbaum 원장은 발표를 마무리 하면서 **연금체계의 전환은 중대하고 장기적인 설계인 만큼 공공, 기업, 개인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